

# 성명서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10길15 트윈타워오피스텔 B동 1201호

전화 02-706-1372 팩스 02-576-9264 이메일 consumer@can.or.kr

(실무담당)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사무총장 김혜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즉시 논의하라 !

- 반려인들의 오랜 바램인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제도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되고 있어 !
- 천만 반려동물 시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관련 시장 성장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 반드시 필요해 !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92%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느껴!

동물병원별 가격 천차만별, 예측가능한 시장 형성해야 신뢰 회복하고  
다양한 지원정책 만들어 나갈 수 있어 !

■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  
이 필요

■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특정 직능만을 고려할  
문제 아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려면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안  
건 검토 및 상정 추진해야 !

○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점차 노령화되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노령화 되면서 갈수록 동물병원 이용은 늘어나고 질환도 복잡해 지면서 진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도 등을 즉시 시행하고 이를 시작으로 하여 동물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적정 가격 책정, 반려동물 관련 직능과 교육의 개발 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동물병원의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충분한 사전고지와 공시는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동물병원 진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는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반려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보험상품 개발이 안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동물보험 시장을 활성화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이같은 정책과 정치권에서의 공약은 이미 수년전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의 반대로 수의사법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반려인들의 오랜 바람이 물거품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도 수의사법 개정안은 안전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시장은 더욱 혼탁하며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 전체 국민의 4분의 1인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은 지금도 여전히 안내받은 진료비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고, 심지어 진료비를 안내받지 못하고 동물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인들의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절음발이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떤 제도도 무

용지물이고 어떤 산업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소비자는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게 됩니다.

○ 선진 외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에 나서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들이 소비자로서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반려동물 진료 및 관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어야 비로소 동물병원을 믿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 현재 계류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가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들에게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반려동물 양육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 9. 30.

